

# 민주당, ‘공정·성장·보호’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나서

코스피5000시대, 정책협약식  
이재명 주식·자본시장 공약 뒷받침  
세계 인센티브, 주주환원률 제고  
주주보호, 제도 개선 등 제안 경청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가 8일 주식·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 받는 성장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 확보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이 후보의 주식·자본시장 공약을 뒷받침하고 장단기 비전을 세우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오기형 위원회 상임위원장,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이강일·김남금·박홍배·이정문·정준호·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정책협약식은, 2007년 처음으로 코스피 2000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가 8일 주식·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 받는 성장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2025년 다시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에 빠져버렸다. 1%대 저성장은 현실이 됐고, 이젠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할 상황”이라며 “‘셀 코리아’가 만연하고, 외국인 투자도 줄줄 빠져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12·3내란사태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았다.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훨씬 나빠졌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주식을 18조 원 넘게 순매도해, ‘코리아 엑소더스’를

주도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보다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그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혁신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성장의 터전,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경제구조와 제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만들겠다. 자산 증식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정책 제안으로 “연금을 제외하면 펀드 등의 장

기투자가 너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계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주주환원률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동이 바뀌려면 이를 강행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법만으로 힘들고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줘야 한다”며 “앞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컨트롤타워를 두고 아젠다를 정해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챙기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가 보기에도 신뢰 받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나온 윤태준 소

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에 시달려 왔다”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빈사상태에 가깝다고 진단하며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 원인은 여러 출처에서 지적하듯 소액주주 보호 미흡에 있다”며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최대주주 자본주의 국가라는 자조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소장은 “일각에서 특정 사안에 국한한 핀셋 규제도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땀땀 처방에 불과하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지배주주들은 상법 핏수로 소액주주의 부를 이전시켜 온 사례가 많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번 좌초됐던 상법 개정안 재입법을 포함해 세법이나 금융감독원·거래소 규정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 죽이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윤 연구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형 상장사 집중투표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주주총회 투명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토론·여조 후 단일화” vs “11일 이전에 해야” 이재명, ‘임플란트 건강보험 나이 하향’ 공약

〈김문수 대선후보〉

〈한덕수 예비후보〉

김문수, 자체 ‘단일화 로드맵’ 추진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져분 신청  
사상 초유의 당 주도 ‘강제 단일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첫 단추인 ‘김문수-한덕수 단일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8일 김 후보는 일주일간의 선거운동 및 ‘14일 방송토론, 15~16일 여론조사 후 단일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 예비후보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났지만, ‘시간’을 무기로 삼은 김문수 후보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한덕수 예비후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고 못 박았다.

당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담판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 자체 ‘단일화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6시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7시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며 당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취소됐다. 그리고 당 지도부와 김 후보의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의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당원의 명령을



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 야외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14일 방송토론, 15~16일 여론조사 후 단일화’ 안을 불가능하다면서 오는 10일까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결단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김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면, 김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역사와 국민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대선 패배의 책임을 김 후보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압박에 아랑곳않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직접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져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고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당 주도의 ‘강제 단일화’는 사상 초유라는 반응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후보단일화 협의회(후단협)’이 떠오른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5년 판 후단협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김 후보가 당의 후보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며 단일화 실패 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예진 기자 syj@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하향과 개수 확대 및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고령층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후보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

적으로 줄이겠다.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에게 평생 2개까지만 가능하다. 본인 부담률은 30%다.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며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박태홍 기자

## 유영상 “고객신뢰회복촉 설치해 위약금 논의”

(SKT 대표이사)

과방위 SKT 해킹 관련 청문회

유영상 SK텔레콤(SKTEL) 대표이사(사진)가 8일 유심 해킹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위약금 문제 제도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영상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



를 조속히 설치해서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고객신뢰회복위에서 위약금 문제까지 다루나”라고 묻자 유 대표는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